시 론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 어떤 비전 갖고 있나?

이 정 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광주 여덟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쟁쟁한 현역 의원을 쓰러뜨린 일곱 신예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어떤 비책으로 '경선이 곧 당선'인 경선의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의문스럽다.

당선자들은 11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의 더 큰 발전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실제로 당선자들이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을까. 그래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펴봤다. 결과는 씁쓸했다. 비전은 고사하고 광주와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조차 빈약했다. 하긴 그런 수사가 뭐 필요했겠는가. 공천으로 게임은 끝났는데.

동남갑 정진욱 표지는 "윤석열정권 심판 남구발전의 희망"이다. 출마 이유와 이력과 역량(2-3페이지), '이재명의 남자'라는 사실과 입법활동 계획(4페이지), 지역구 공약(5-10페이지)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와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엔 무척 인색했다. '장학 퀴즈' 출신 천재란 사실이 무색했다. 지역구 공약을 꼼꼼히 챙기려면 구청장이 제격이 아닐까.

동남을 안도걸 표지는 "광주와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경제전문가"다. 기재부 차관 경력도 넣었다. 국가와 광주와 지역구 발전의 비전(2페이지), 자신의 이력(3-4페이지), 광주 미래를 위한 그간의 준비(5페이지), 국가 미래를 위한 역할(6페이지), 지역구 공약(7-10페이지) 등이다. 국회의원이 돼 광주와 국가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잘 드러났다.

서구갑 조인철 표지는 "서구, 광주,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다. '준비된 예산전문가'도 달았다. 출마 이유와 자신의 업적(2-4페이지), 국가와 광주와 지역구를 위한 공약(5-6페이지), 국가 미래를 위한 역할(7페이지), 광주 미래를 위한 역할(8페이지), 지역구 공약(9-10페이지) 등이다. 광주부시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미래 비전은 너무 부족했다.

서구을 양부남 표지는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행복서구 정권심판'도 달았다. 출마 이유와 정의로운 자신의 이력(2-3페이지), '이재명의 남자'와 민주당 활동(4페이지), 지역구 공약(5-9페이지), 민주당 총선 공약(10페이지)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혁'을 제외하면 광주와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북구갑 정준호 표지는 "확실한 인물, 더 확실한 정권교체"다.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란 수식어도 붙였다. 출마 이유와 경력과 활동(2-4페이지), 북구와 광주와 국가의 미래 가치 비전(5-6페이지), 지역구 공약(7-10페이지) 등으로 이뤄졌다. 동신고 천재로 알려졌고 8년을 준비한 젊은 정치인이지만, 광주와 국가 미래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피력하지 못했다.

북구을 전진숙 표지는 "광주답게 전진"이다. 출마 이유(2페이지), 자신의 이력(3페이지), 국가 사회를 위한 공약(4페이지), 지역구 공약(5-6페이지) 등 달랑 7페이지다. 돌봄 책임, 여성고용,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등 거시적 공약이 눈에 띈다. 하지만 광주 미래를 위한 자신의 계획은 없었다. 왜 짧은 공보물을 만들었을까. 선거비용 때문이었을까.

광산구갑 박균택 표지는 "광주가 선택한 정권탈환 선봉장"이다. 당대표 법률특보와 고검장 출신도 밝혔다. 출마 이유(2페이지), 광산 출신(3페이지), 이력과 특장(4페이지), 지역구 공약(5-6페이지), 마지막 7페이지는 '이재명의 남자'를 암시하는 사진으로 장식됐다. 역시 짧은 분량이었다. 광주와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과 자신의 포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광산구을 민형배 표지는 "광주의 명령, 검찰독재 OUT"이다. '민주당 최강 공격수'란 수식도 달았다. 출마 이유(2페이지), 이력과 '이재명의 호위무사'란 사실(3-4페이지), 국회 4년 활동과 성과(5-7페이지), 국가 미래를 위한 역할(8페이지), 광주와 지역구 공약(9-10페이지) 등으로 만들어졌다. 광주시장과 최고위원을 꿈꾸는 재선 당선자답지 않았다.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일곱 신예 당선자에게 묻는다. 경선에서 경쟁한 현역 의원들은 왜 재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광주는 다선(多選) 정치인 배출에 매우 인색한 도시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이번 승리가 4년 뒤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광주 사람들은 재선 국회의원을 여간해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광주와 국가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면 가차없이 퇴장시킨다. 당선자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기 고

목포시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

박 기 민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부회장

"노령 인구가 괄목상대 늘어나는 목포에도 작은 시니어 공원을 겸비한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섰으면 합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목포시 총 인구 21만4천448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4만2천215명으로 19.69%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시내에는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등 2개의 노인 복지관이 있으나 시설 협소로 이용이 불편해 노인 종합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먼저, 양 복지관이 개설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의실은 협소하고 강의실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반영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각각 연간 8만여명의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해 주변 상가와 주거지에서 불편을 호소하며 교통 민원이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둘째, 시설에 비해 좁은 밀집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시니어들의 주요 이용 시설인 교육 공간의 절대 부족과 협소, 휴게 공간과 급식 시설의 면적도 협소해 이용자들의 품격을 격하시키고 있다.

셋째, 30여년 전에 준공한 하나노인복지관 건물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개연성이 다분하다. 4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은 물론, 복도의 폭도 좁아 쌍방 통행으로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해 곳곳에 직원들이 항상 배치돼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지도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을 투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협소한 건평에 노인회 목포지회, 목포복지관, 무공수훈자회 지회 등의 3개 기관이 함께 사용 중으로 건평도 협소하고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양 복지관이 소재한 목포시 구도심권에 있는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는 오는 2028년 3월1일 옥암지구에 통합 이전을 앞두고 있어 두 학교 중 한곳에 두 복지관을 통합한 가칭 '목포시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폐교에 따른 건물 철거의 비용을 절약하고 복지관 시설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만 소요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양 복지관의 합계 연면적이 3천776.70㎡임에 비해 목포고등학교의 연면적은 5배 수준(1만4천746㎡)이며 목포여자고등학교의 연면적은 4배 수준(1만1천368㎡)에 이르러 복지관의 다양한 이용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운동장은 시니어들의 운동 공간을 확보해 게이트 볼장, 트랙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 체육관 역시 각종 구기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급식실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대형 급식실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도서실은 시니어들의 휴게 888999쉼터 및 도서관으로, 기숙사 시설은 노인 주간보호 시설 등 복지 시설로 개조해 사용하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도 인문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능관, 정보관 등으로 구분해 배치함으로써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해 힐링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시니어 대상으로 각종 발표회나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대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재활센터를 마련해 자급 생산, 판매까지 연계해 일자리 창출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주차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현 목포노인복지관이 분리해 이전하게 되면 목포시 노인지회도 단독 건물을 보유하게 돼 각종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거주를 선호하는 구도심권의 중심 시설로 거듭남으로써 경제 활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설 전시관을 개설해 시니어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다.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는 인프라가 갖춰진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기를 갈망하면서 때마침 이전하는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붙잡았으면 한다.

독자투고

새롭게 떠오르는 가상자산 사기, '소비자주의보'

#최근 A씨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로 처음 보는 가상자산 사이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상자산과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거나 출금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A씨는 의아했으나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고, 접속한 사이트에는 메시지 내용과 동일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코인을 모두 인출하려고 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 후 그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했다는 거래내역이 남아야 인출된다는 문구를 보고 가상자산 사이트에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액은 인출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렇다.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였던 것이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과거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성행하던 수법을 똑같이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져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가 빗발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인을 일정비율 싸게 판매한다는 등 '가짜코인'을 미끼로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도 증가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거래소나,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메세지 혹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끝으로 관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찰청·정부,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상준·해남경찰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조선업 주력 전남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 다해야

중소형 조선소는 대형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취약하다. 안전 관리도 마찬가지다.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조선업은 대표적 고위험 업종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말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작업장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전한 조선소' 구축 지원사업에 조선업 밀집 지역인 전남을 비롯해 경남·부산·울산 등 전국 4개 시·도가 선정됐다. 생산 현장 진단을 통해 맞춤형 보건·안전·환경(Health Safety Environment)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중소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모두 10곳을 지원한다. 고급 안전장치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시스템을 지원하며, 화재 안전, 조명 등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공인기관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전체의 44.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집중한 성과로 여겨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하반기에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선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다. 하지만 미숙련 및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생산 현장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제로 전남도는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우대 가산점을 적용한다. 작업 환경 개선은 청년층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자규모 줄인 한전 대내외 위기로 험로 예상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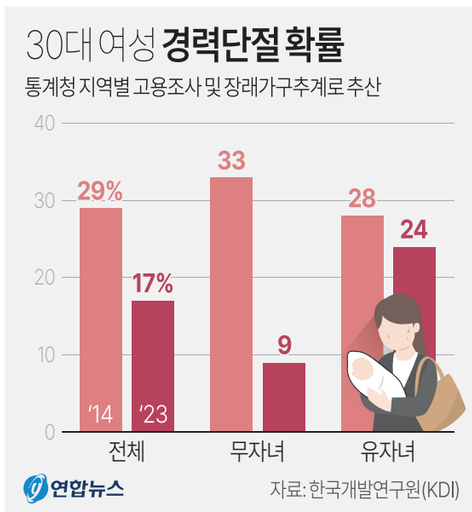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매출액이 85조8천억 여원으로 최근 7년간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2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2년 32조7천억이었던 적자는 4조5천억원으로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같은 경영 호전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는 전기판매 수익 급증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 중 84조572억을 차지하고, 전년보다 16조8천원 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6조5천억 감소해 2022년(-33조9천억)보다 27조4천억원 가량 적자를 줄였다.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산업용만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수년째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온 탓에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을 열어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다 환율도 달러당 1천400원에 육박하며 크게 출렁이고 있다. 한전의 재무적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에너지 원가 상승 추이가 반영되기까지 3-6개월의 시차를 둔다. 초읽기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역시 들썩거리고 있다. 한전의 뜻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다. 정부도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언제 얼마 만큼 올릴지가 문제라며 상황을 봐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터졌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김동철 사장 취임과 함께 강도높은 자구 방안을 성실 이행하면서 한숨 돌린 한전의 고민이 깊다. 경영 정상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래픽 뉴스

여성의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차지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연구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이 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